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A와 B는 모두 (가) 와/과 같은 현상을 정치로 본다. 그러나, A와 B 사이에는 정치 행위의 주체에 대한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A는 정치 행위의 주체는 정치 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권력뿐이라고 본다. 반면, B는 국가 권력뿐 아니라 시민 단체나 기업 등 여타 사회 집단도 정치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나) 와/과 같은 현상의 경우 B와 달리 A는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① (가)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장 선출 선거'가 들어갈 수 있다.
- ② (나)에는 '법률안 제출을 위한 국무회의의 심의'가 들어갈 수 없다.
- ③ A에 비해 B는 정치의 행위 주체가 한정적이라고 본다.
- ④ B에 비해 A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용이하다.
- ⑤ A와 B 모두 다른 사회 집단과 구분되는 국가만의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을 통한 통치 질서의 확립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에서도, A는 법률이 담아야 할 가치의 정당성에 주목한다. 즉, 의회의 입법 권한이 국민 주권에 비롯되었다더라도 그 법률이 인간 존엄과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면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이 미리 공포된 법률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자체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보며, 법률의 실질적 타당성 판단은 입법자의 고유 영역이라고 본다.

- ① A는 통치 행위의 실질적 정당성만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B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A와 달리 B는 법률의 입법 목적과 그 수단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함을 강조한다.
- ④ B와 달리 A는 통치 권력 행사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중시한다.
- ⑤ A와 B 모두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다.

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 개발 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두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A는 우주 발사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직결되므로 자국의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B는 우주 탐사 데이터의 공유와 공동 연구를 통해 우주 개발의 성과가 인류 전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우주 조약에 명시된 평화적 이용 원칙을 존중하면서 각국이 협력한다면 우주 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A는 공동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B는 국제 평화를 위한 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③ A와 달리 B는 국제 관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④ B와 달리 A는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 ⑤ A와 B 모두 국제 사회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4.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교사 : 오늘 배운 정치 참여 집단 A~C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을 한 사람씩 이야기해 볼까요?

갑 : 저는 아파트 입주민의 이익을 위해 구성된 아파트 입주민 단체에 가족과 함께 가입하여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을 : 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가입하여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 공약을 제시한 집단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병 : 저는 ○○시의 이익 증진을 위해 결성된 집단에 가입하여 정부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독거 노인 지원이라는 공익 실현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사 : A에 해당하는 집단에는 갑과 병이, B에 해당하는 집단에는 을과 병이 가입하였네요. 한편, 을은 유일하게 C에 해당하는 집단에 가입하였어요.

- ① A의 활동은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
- ② B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충원 기능을 수행한다.
- ③ C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 ⑤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가?'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t~t+3 시기 중 정부 형태는 2회 변경되었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같으며, t+3 시기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같다. t 시기에는 A당의 의석수가 B당과 C당의 의석수의 합과 같으며, B당의 의석수는 C당의 의석수의 2배이다. 표는 시기별 각 정당의 직전 시기 대비 의석수 증감률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구분	A당	B당	C당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
t+1 시기	-20%	+20%	+20%	A당
t+2 시기	-25%	+50%	㉠	A당
t+3 시기	㉡	-50%	0%	B당

* t~t+3 시기에 정당은 A~C당만 존재하고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동일하며, 각 시기 내에서 정당별 의회 의석수,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의원 내각제인 경우, 각 시기에 최초 구성된 내각은 해당 시기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연립 내각은 구성되지 않음.

- ① ㉡은 ㉠의 2배이다.
- ② A당의 의석수는 t 시기에 비해 t+3 시기에 많고, C당의 의석수는 t+1 시기에 비해 t+2 시기에 많다.
- ③ t+1 시기에 행정부 수반은 정책 집행을 위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t+3 시기와 달리 t+2 시기에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t~t+3 시기 중 연립 내각을 구성한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A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헌법은 개인의 자유가 형식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이로 인해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가에 의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B도 함께 반영되어 있다.

- ① A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② 국가가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사회 보장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A의 실현 방안이다.
- ③ B는 국가가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④ B의 실현 방안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임금 보장을 들 수 있다.
- ⑤ A와 B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7.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무역 협정 체결 과정에서는 여러 헌법 기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A가 외국과의 통상 조약을 체결하려면 B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상호 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은 C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D는 국무 위원 임명 제정을 통해 B의 구성에 관여하고, C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 위원과 함께 C에 출석하여 조약 내용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조약이 체결되면 E는 조약에 따른 재정 지출의 결산안을 검사하여 A와 차년도 C에 보고한다. 한편 F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러한 F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9인 모두를 임명하되 헌법상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후보자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였다.

- ① F는 항고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② A는 B의 심의를 거친 경우 국민 투표 부의 없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C의 장(長)은 위헌·위법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 F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 ④ D는 B의 장(長)에 대한 해임을 A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⑤ E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국정 감사를 통해 D를 견제할 수 있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최근 ㉠△△구의 A는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청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예산안에는 건축 비용과 함께 향후 3년간의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B에 제출된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이 조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B의 일부 구성원은 특정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① ㉠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행정구(區)이다.
- ② ㉠에 소속된 B의 지역구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진행된다.
- ③ A는 지방 자치 단체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 ④ B는 주민 투표를 거치지 않은 조례안을 의결할 수 없다.
- ⑤ 조례안 재의 요구권은 A에 대한 B의 견제 수단에 해당한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HOME > 연재 > ◇◇◇의 헌법 교실
공직 선거 관련 헌법 재판소 결정 분석

갑은 2014년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지역 신문에 창간 자금을 지원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후 2018년에 진행된 지방 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되었으나, 2015년의 기부행위로 인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다. 갑은 형사 재판 도중 선거일 이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시작일을 '당해 선거일 후'로 규정한 ○○법 제268조 제1항이 어느 선거일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갑이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위 조항의 '당해 선거일 후'는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을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연설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을은 ○○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법 제264조가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 이에 을은 ○○법 제264조가 자신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법을 위반하는 범죄는 공직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이보다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이 불가하다며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보 기>—

- ㉡.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갑에 대한 검사의 기소 처분은 유지될 것이다.
- ㉢. 을에 대한 형사 재판의 전제가 되는 ㉠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과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모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갑은 을과 음식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을을 밀쳐 넘어뜨렸고, 을은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을은 즉시 갑을 고소하였고, 이후 검사는 상해 혐의로 갑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갑은 이에 항소하였다.

○ 평소 병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정은 주차장에서 병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는 병의 차량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를 발견한 병이 신고하여 정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검사가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 하였다. 이후 검사는 정을 재물 손괴죄로 기소하였으며, 정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 후, 1심 법원은 정에게 징역 3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 ① 갑을 고소한 을은 갑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 ② 갑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인한 항소심 계속 중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1심 법원이 정의 보석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기존에 발부된 구속 영장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 ④ 1심 법원은 정에게 형 선고의 취소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⑤ 피해자인 병은 정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을과는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는 고용 계약을, 간호사 병과는 간호를 담당하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환자 정에게 수술을 시행하던 중 주의 불충분으로 수술 기구를 환자 체내에 남겨 두어 정이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같은 시각 병은 갑의 업무 지시로 입원 환자 무를 간호하던 중 실수로 무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파손시켰다. 한편 갑은 병원 내 환자 치료 목적으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친아들인 A(24세)에게 산책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A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갑자기 반려견이 흥분하여 병원을 방문한 B를 물었으며, 큰 위협을 느낀 B는 부득이하게 갑의 반려견을 걷어차 반려견이 크게 다쳤다. 일주일 후, 휴일을 맞이한 을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로 약속 장소에 가던 중 부주의로 C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이로 인해 C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C의 오토바이에는 큰 손상이 발생하였다.

- ① 갑은 정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갑이 병의 사용자로서 무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병은 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갑은 반려견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B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B는 반려견을 걷어찬 것에 대하여 A가 아닌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⑤ 을은 C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는 경우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한 C의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아도 된다.

12.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17세)은 좋아하던 촬영 감독의 사인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사인회에 가기 위해서는 감독의 신작 화보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을(28세)에게 고가의 한정판 화보집의 수령과 대금 지급을 다음 날에 하는 조건으로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을이 화보집의 수령은 다음 날로 하되 대금을 즉시 지급해야만 계약하겠다고 하자 갑은 이를 수락하였다. 을은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한편 갑은 사인회 당일 전날, 오래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고장 나자 병(25세)이 운영하는 중고 전자 기기 매장을 방문하였다. 갑은 병에게 A의 명의로 작성된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매장에 진열된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동의서를 확인한 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갑의 유일한 법정 대리인인 A는 두 계약 모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 ① 갑의 청약과 을의 승낙으로 화보집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
- ②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을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에도 갑에게 화보집을 주지 않은 경우 갑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A가 노트북 매매 계약을 추인하지 않은 경우 병은 A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⑤ 갑이 병에게 위조된 A의 동의서를 제시하였으므로, A는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3. 기본권의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 관한 권리는 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의사 표현을 본질로 하되,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정치 공동체 전체의 의사 형성이라는 공적 과정에 직접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는다. 이는 주권자의 지위에 기초하여 국가 기관의 구성과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의미하며,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비로소 성립한다는 점에서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와 구별된다.

- 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③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④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다.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사: A국의 법률 제·개정 내용과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 형법 및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을 해 봅시다.

- 2022년 1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을 폭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 제1조가 제정됨.
- 2024년 2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을 상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법 제2조가 제정됨.
- 2024년 7월 타인을 폭행하여 '가정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자에게는 보호 관찰 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법 제1조가 제정되었다.
- 2024년 9월 △△법 제1조에서 형벌에 관한 부분만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사례>

갑(19세)은 자신의 학교 후배인 을(16세)과 2024년 6월에 병(15세)을 함께 폭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병은 2024년 8월 자신의 친동생 정(13세)과 함께 갑을 폭행하였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갑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갑, 병, 정은 모두 경찰에 인계되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을도 갑과 함께 병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인계되었다. 경찰은 갑, 을, 병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였으며, 정은 가정 법원에 송치하였다. 검사는 갑과 병을 폭행 혐의로 형사 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을의 경우 연령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는 △△법 제2조에 근거하여 갑을 기소하였을 것이다.
- ② 갑은 형사 법원에 의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 ③ 검사는 을의 행위에 대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④ 검사는 병의 행위가 전체 범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⑤ 정의 행위에 대하여 가정 법원 소년부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5. 다음 자료를 참고할 때, 위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사 제재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형벌의 경우 당연히 행위 시로 소급 적용하여 부과할 수 없으나, 보안 처분의 경우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행위 시로 소급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 <보 기>—
- ㄱ. 갑은 형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없다.
 - ㄴ. 병이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법 제1조를 근거로 보호 관찰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 ㄷ. 정은 가정 법원 소년부로부터 □□법 제1조를 근거로 보안 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